

▲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3월 10일 14기1년차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충남지부관계사용자에게 요구할 2026년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호를 통해 요구안의 취지와 근거에 대해 현장 조합원 동지들과 공유합니다.

1. 임금인상

월 기본급 149,600원 인상
(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 2025년 금속노조 조합원 월 고정급은 5,039,287원입니다. 2026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 1.95% 전망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분배되어야 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생계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는 14.4% 올랐는데 금속노조 조합원의 임금은 11.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2년안에 실질임금 하락분을 메우기 위해 올해 1.1% 인상 요구를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최소한 월 고정급 251,964원이 인상되어야 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액으로 환산하면 149,600원입니다. (고정급:기본급=1.68:1)

2025년 월 고정급 5,039,287원	x	2026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임금보정지 (1.95%+1.95%+1.1%)
---------------------------	---	---

2. 중앙교섭 참가

중앙교섭 불참 회사는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고 2027년부터 중앙교섭에 참가

□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산별교섭의 가장 최상위의 교섭군입니다.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의 구조가 핵심입니다. 산별교섭 강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노사가 기업별 교섭을 넘어 하나의 교섭군으로 묶여, 집단교섭과 공동투쟁이 가능해야 합니다. 충남지부 집단교섭군에는 여전히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에게 금속산업사용자단체 가입과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못 박기 위한 요구입니다.

3. 충남지부 발전기금 정상화

기금 연체 회사는 올해 지부집단교섭 타결전 완납

□ 충남지역 노사는 2007년 합의를 통해 충남지부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기금납부를 중단, 연체금액이 발생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 성질인 만큼 교섭의제로 다루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4. 초기업교섭활성화노사공동대지자체 요구

- ① 충남도는 지부집단교섭 합의 효력을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
- ② 충남도는 노사 지원 정책 시행 시 지부집단교섭 참가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 ③ 충남도는 지역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지부집단교섭을 진행하는 금속 노사단체 참여를 적극 보장
- ④ 충남도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협의 구조 조속히 마련

□ 충남지역 노사가 공동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지자체(충남도)에 요구하여 지부집단교섭 참가 사용자 확대를 꾀하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초기업교섭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6.3 지방선거 국면이 있는 만큼, 정세를 잘 활용하여 지부집단교섭의 효능감을 높이고 교섭 구조를 강화, 확대하고자 합니다.

5. 노동쟁의 정의 확대에 따른 권리 보장

아래에 대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우선 교섭에서 논의
가. 정규직 전환, 계약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 지위
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다.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의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법적으로 당연히 위 의제에 대해 교섭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부협약으로 못을 박아 정규직화, 구조조정, 단협 위반 등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하지 못하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려는 목적입니다.

6. 정년퇴직 예정자 지원

회사는 정년퇴직에 도달한 조합원에게 퇴직 후 인생설계를 위한 현장 맞춤형 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조합원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매년 정년퇴직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년연장 요구는 별개로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 되고자 퇴직 프로그램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동향